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평행선’

(국회가 총리 임명)

헌정특위 회의...민주당-한국당 정부형태 놓고 대립

심상정 “국회가 총리 추천 방안 검토를” 대안 제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형태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여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입장대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내각제가 되는 것인데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이념이 극단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단일 경우 행정부 마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헌의 초점은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중섭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어김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고, 정부 실패로 이어졌

다. 소수권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 기능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지를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전(前) 대통령,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모두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를 말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에서도 이렇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면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회의 총리추천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됐고, 야당은 청와대와 갈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총리

를 선출하면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도입을 들고 나서자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됐던 민주당안이 됐던 간에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통령 권한 분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헌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 꺼진 민주당 회의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의 불이 꺼져 있다. 앞서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원내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 전남도당 공천심사

후보추천위 18명 구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일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와 재선의위원회 구성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천관리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7명, 총 18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공천관리위 위원장에는 김영호 전남도당 지방자치이카데미 원장이 선임됐다. 위원에는 여성 9명(50%), 청년 4명(22%)도 포함됐다.

선임된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중앙선거연수원 강사, 김미영 전남도립대학 교수, 김진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김재경 여수를 지역여성위원장, 김향순 광주지법 순천지원 조정위원, 노성경 전 전남일보 논설위원, 박영중 전남도당 사무처장, 박은서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다. 또 박장진 송원대 학생처장, 이근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이승정 전남 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이명숙 전 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장, 지미경 변호사, 천진용 전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역전 전남도 투자유치특별보좌관, 최우경 전 화순군청 서기관, 황영란 전남여성농민회 감사 위원도 선임됐다.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 3명(50%), 청년 1명(17%)도 참여한다. 공천관리위는 앞으로 중앙당 지침에 따라 후보 자격심사, 경선관리, 후보 결정 방법 의결 등을 맡는다.

/박정욱기자 jwpark@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의 불이 꺼져 있다. 앞서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원내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광주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늘어날 듯

획정위 인구동수 비율 조정...동구 1석 줄고 광산 1석 확대방안 논의

광주지역 구의회 한 선거구에서 3~4명의 구의원을 뽑는 3~4인 선거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오는 6·13 지방선거의 구의원 숫자는 동구가 1석 줄고 광산은 1석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 광주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전남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고 있다.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 정점사항은 구의원 정수를 정하기 위한 인구와 동수 적용비율을 현행 3대 7에서 5대 5로 변경하고,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창당으로 다당제가 자리 잡아가면서 다수의 당

이 기초의회에 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조정이다. 또 특정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꾸준히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기초의원을 더 배정하기 위해 인구와 동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인구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경우, 광주 전체 기초의원 수 59명은 변화가 없지만 인구 수가 적은 동구가 1석이 줄어 광산이 1석 늘어난다. 동구의 경우 현재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광산구는 14명에서 15명으로 바뀐다. 서구, 남구, 북구는 현재의 11명, 9명, 18명이 유지된다.

또 인구가 급증한 광산구 수원동에 광산 5선거구가 신설되면서 2명의 구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산지역 다른 선거구

에서 의석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재 25곳에서 20곳으로 줄어든다. 이 중 2인 선거구는 4곳뿐이고 한 곳도 없었던 4인 선거구는 3곳이 신설되며 3인 선거구도 13곳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25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9개, 2인 선거구는 16곳이다.

이 획정안은 오는 9월께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자치구나 구의회 의견 수렴 과정과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긴급 안건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수와 명칭, 구역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출마’ 강기정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6일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성장과 광주의 아들딸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민께 보고 드리고 광주의 근본적인 전환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500만 광주 광



역경제권 구상을 발표 한데 이어, 최근에는 108명의 교수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싱크 탱크 ‘광주성장 the CUBE’로부터 300대 정책과제를 전달 받는 등 활발한 정책선거를 펼치고 있다.

또 최근 시민들과 7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회’를 하는 방식의 이색 출마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6일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민 구청장은 이날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서 “먼 거리에 있는 과녁의 중심을 맞추려면 그 중심보다 좀 더 높이 조준해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광주공화국’ 선포를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일별



자치, 행정자치, 재정자치, 복지자치, 교육자치, 공간자치, 경제자치, 에너지자치, 인권자치 등 9가지를 꼽았다.

시민운동가로 해남 출신인 민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당시 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 대선때는 정국 기획수상을 뒷받침하는 등 정통 친문인사로 꼽힌다.

김영남 광주시의원, 서구청장 출마 선언

김영남 광주시의원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더욱 나은 서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구 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삶이 향상되는 자치행정도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교육



문화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다양한 상상전략의 경제도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를 내걸었다.

광주시의회 6·7대 재선의원인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호남권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들 “금호타이어 해의 매각 반대”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금호타이어 해의 매각을 반대하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남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전 광주 시의원·민주당)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어렵게 마련된 노사 합의안을 거부하고 해의 매각을 추진하는 채권단의 일방적 입장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성수 전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와 사측이 상호 윈윈한 타협점을 찾아 지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한필 광산문화경제연구소장도 “금호타이어는 군 전투기와 훈련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타이어업계 유일한 방위산업체다.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할 경우 군 타이어 생산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수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자본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해의매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